

「국방갈등현황 및 관리방향」 토론포지

문 창 기 사무처장 (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)

1. 국방부와 군이 국방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임
 - 전체적으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차원에서 각종 갈등과 관련한 해결을 위해 매뉴얼을 만들고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
 - 그러나 매뉴얼을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데,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.(물론 요약했기 때문일 수 있지만, 이후 전체적으로 국방갈등의 관리방향에도 관련 내용이 부족함)
 - 또한 갈등을 바라봄에 있어 시민단체에 있는 본인과 일정하게 차이가 있음(예 ; 강정해군기지, NGO 개입 등)

2.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방부 갈등과제 현황은 총 19건으로 각 사안들의 갈등 원인을 사안별로 분석해보면, 환경문제(소음, 오염 등), 재산권 행사 제한과 하락, 최근에는 도시의 성장 및 팽창에 있어서 군부대 또는 군시설로 인해 제약받고 있기 때문임
 - 현재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공권력에 의한 강제 등에 의해 조성되었음. 또한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조성 등을 볼 때 여전히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의 폭력이 행사되고 있음
 - 지금처럼 민주화된 현 상황에서 주민들은 국방이라는 개념에 앞서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, 또 국방시설(군부대)이 들어오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될 수 밖에 없음
 - 아울러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과거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더라도 현재는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 또는 시설이 다수임. 이에 대

해 자치단체와 인근의 주민들의 도시개발과 재산권 행사의 차원에서 이전을 요구하는 것. 군부대가 도심 내에 위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적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봄

3. 갈등을 관리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대에 대한 '신뢰'의 문제라고 생각. 이러한 신뢰의 문제는 정보의 공유가 이뤄져야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임
 - 그러나 갈등관리방향에서 언급한 전략들을 보면 국방갈등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할 공간, 정보공유의 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
 - 아울러 우려되는 점은 갈등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은 오히려 갈등의 본질적 부분에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음. 결국 갈등관리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흐르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음.
 -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짐